

학생 한명 한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웁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1 기초학력·기본인성 책임교육을 추진합니다.

- 기초학력 책임교육**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지원
- 정서·인성 교육 강화** • 학생 사회·정서 역량 지원, 인성·체육·예술교육 강화

2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으로 혁신합니다.

- AI 기반 맞춤 교육** • AI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선도학교, 디지털 보조교사
- 교실수업 혁신** • 학생 참여형 수업, 교원의 수업·평가 역량 강화, 질문하는 학교 육성

3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합니다.

-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 선택과목 다양화 지원,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 시행, 과목이수제 적용 및 현장 지원
- 학교교육 다양성 확대** •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내실화, 마이스터고 2.0,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기숙형 중·고 지원 등 지역 교육력 제고

4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역량 강화 및 환경 조성** • 수업 질 제고 • 교육활동 보호 강화 • 수업우수교사 우대 • 행정업무 경감

행복한 교육

07

vol.492 2023 JULY



06 에듀피플

김우승 글로벌대학위원회 부위원장
#혁신 #벽 허물기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로 시동

40 교육자치시대

충청북도교육청
전국 최초의 놀이교육지원센터
'놀이'로 성장한다!

46 진로직업인

로컬 크리에이터 박준규 서피비치 대표
여행자의 '로망'과 '결핍'을 채우는
바닷가를 기획하다

COVER STORY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설립한 놀이교육지원센터가 놀이교육의 새 장을 열고 있다. 놀이공간인 '와르르'에서 레고 놀이에 참여한 봉명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발행일 2023년 7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편집인 대변인 김천홍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신광수
사무관 이인숙, 사무관 배선연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객원)김혜진, 서지영, 이경화, 정성경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 본관 5층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

특집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 12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 16 미래, 고등교육을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
- 19 전문대학,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거듭나다
- 2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 26 대학 내외부 벽 허물고 대학개혁 선도하는, 글로벌대학
- 30 해외의 지자체와 대학의 성공적인 협력사례



30

- 02 네 꿈을 펼쳐라
충주시 중산고등학교 '풋사랑 동아리'
"어르신 마음까지 마사지해드려요"
- 06 에듀피플
김우승 글로벌대학위원회 부위원장
#혁신 #벽 허물기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로 시동
- 34 교육웹툰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글로벌대학'
- 36 교육포커스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역할
- 40 교육자치시대
충청북도교육청
전국 최초의 놀이교육지원센터 '놀이'로 성장한다!
- 44 이달의 교육뉴스
공정한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외



02



40



46

- 46 진로직업인
로컬 크리에이터(지역가치창출가)_ 박준규 서피비치 대표
여행자의 '로망'과 '결핍'을 채우는 바닷가를 기획하다
- 50 일상의 심포
한국 속 작은 독일, 남해독일마을
- 54 이야기 인문학
1893 시카고 만국박람회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 56 교실혁명
인공지능 수업 시리즈 ④
6학년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윤리 이야기
- 60 현장중계
2023년 교육정책이슈 토론회
- 62 명예기자 리포트
고교학점제 시너지를 가져올 학교공간 혁신
- 64 예쁜 우리말
여름, 썬물빛과 물비늘에 빠지다



50

충주시 중산고등학교
‘풋사랑 동아리’

“어르신 마음까지 마사지해드려요”

“어르신, 시원하세요?” “아이고, 손이 야무지기도 하네.” “조심해서 일어나세요.” “고마워, 시원하네.” 충주시 양성면 어르신들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했다가 뜻밖의 발 마사지를 받고 한결 표정이 밝아졌다. 이날 어르신들은 손주 같은 학생들의 다정한 손길에 잠시 쉼스러움을 내려놓고 발을 내어 주었다. 혹여 어르신들이 불편할까 봐 거듭 괜찮은지 확인하는 학생들은 바로 충주 중산고등학교(교장 이병근) 발 마사지 봉사 동아리 풋사랑 부원들이다.



- 1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고생하며 일군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심을 담아 '건강하세요'라고 말을 건넨다는 학생들
- 2 동네 초등학교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발 마사지 봉사를 하는 학생들

전문가 발 마사지 교육 참가 후 봉사활동

지난달 17일 양성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풋사랑 동아리는 2019년에 결성되어 올해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역 어르신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조현민 교사와 1~3학년생 40여 명이 함께 활동 중이다.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발사랑 봉사단으로 활동하는 유재선 단장과의 인연이 동아리의 토대가 되었다. 설립 당시 충주시 지현동 사과나무길 축제에서 발 마사지 봉사활동 중이었던 유 단장을 만난 조 교사는 ‘이거다’ 싶어서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도와달라고 제언했다. 유 단장과 풋사랑은 그때부터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동아리 부원들은 유 단장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22가지 기본 발 마사지 교육을 매일 1시간씩 받았다. 발 마사지 교육 외에도 학교에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함께 받으며 차근차근 활동 준비를 해왔다.

서로 실습 대상이 되기도 했다. 민정옥(1학년) 학생은 “처음 마사지 실습교육을 받을 때 갑자기 실습 대상이 되어 양말을 벗어야 해서 무척 당혹스러웠다.”라고 떠올렸다. 남에게 발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직접 경험해 본 부원들은 봉사활동을 나가서도 좀 더 조심스럽게 어르신들을 대하게 되었다.

평소에도 목소리 기부 봉사, 반려동물보호센터 봉사, 지역사회 행사 부스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왔던 조 교사였기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조 교사는 학생들이 발 마사지 봉사를 통해 어르신을 공경하게 되고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매주 토요일, 시간을 쪼개 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던 2022년부터 풋사랑 동아리는 본격적인 대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충주 관내 요양원, 지역 노인복지센터, 경로당을 비롯해 각종 지역축제에서 어르신들을 만났다. 충주 시내뿐 아니라 교외 지역도 가리지 않고 찾았다. 매주 토요일 봉사할 수 있는 곳이면 부원들은 어디든지 달려갔다. 각자 바쁜 일정을 쪼개어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여 명이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동아리 부회장을 맡은 조성은(2학년) 학생은 “최근에 목행 초등학교 행사 지원을 갔을 때 마사지를 받고 가신 어르신께서 고마워하시며 전을 만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어르신들께 더 감동받는다.”라며 “처음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봉사활동 자체에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올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정영록(2학년) 학생은 묵묵히 어르신의 발을 마사지하면서 말한다. “발을 만지는 것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두 발로 고생하며 삶을 일궈 나간 것을 깨닫게 된다. 저절로 어르신들에게 ‘건강하세요’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며 일단 참여해 볼 것을 권했다. 다른 쪽 발을 마사지 중이던 이윤재(1학년) 학생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꾸준함을 배울 수 있다며 내년에도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이처럼 풋사랑의 봉사활동 기획부터 활동 참여까지 모든 과정은 부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난 5월 부원들은 감사와 사랑의 달을 맞아 중산고 학생들을 위해 애쓰는 교내 급식 조리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서진(2학년) 학생은 평소 교직원분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는데 발 마사지를 하는 동안 담소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조 교사는 풋사랑 동아리 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인 만큼 학생과 어르신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②



3 충주 자원봉사센터 유재선 단장으로부터 22가지 기본 발 마사지 교육을 받는 풋사랑 동아리 학생들

45 풋사랑 동아리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충주 관내 요양원, 지역 노인복지센터, 경로당을 비롯해 각종 지역축제를 찾아다니며 발 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다.



Mini Interview



박서진(2학년) 학생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동아리 회장까지 맡게 되었다.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풋사랑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작년에 경로잔치에 나갔을 때 마사지를 받아서 좋으셨다며 직접 만든 고추장과 참기름을 주시겠다는 할머니가 기억에 남는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정말 좋아해 주셔서 오히려 내 마음이 벅찼다. 그래서 주말에 약속을 잡을 때 봉사활동이 늘 1순위이다.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을 모아서 참여하고 있다. 부원들이 함께 해줘서 고마운 마음이 크다.

이준희(2학년) 학생

올해부터 유기견 봉사 동아리와 풋사랑을 함께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풋사랑 활동을 권해준 서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학교에서 배운 발 마사지를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는 것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진짜 기쁘다. 시험 기간과 겹칠 때는 난감하지만, 미리 시험 대비를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가끔 교외에서 하는 축제나 경로잔치 행사에 나갈 때는 나들이 가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나설 때도 있다.



민정욱(1학년) 학생

복지 관련 분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서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학교에서 봉사부장도 맡고 있다. 발 마사지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 다양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는데 발을 만지는 동안 어르신들이 열심히 살아오신 흔적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호암지생태공원에서 만났던 유쾌한 어르신이 기억에 남는다.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지는 바람에 마사지 시간은 길어졌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어르신뿐 아니라 내게도 행복을 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 보자!

이상성(1학년) 학생

학기 초 동아리 모집 기간에 담당 선생님이 모집 안내 방송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어서 인상 깊었다. 평소에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렸다. 발 마사지를 해 본 경험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마사지하는 동안 정말 좋아해 주셔서 뿌듯했다. 다리를 다친 어르신의 발을 만져드린 적이 있는데 어르신께서 연거푸 고맙다고 해주시니 더 열심히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내년에도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다.



장세은(1학년) 학생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아서 어색하기도 했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다 보니 이제는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데도 익숙해졌다. 교육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발 마사지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데 그 모습에 점점 봉사 시간이 좋아지고 있다. 경로잔치 행사나 축제 때도 부스를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간식도 주시고 등도 두드려 주시는 데 보람을 느낀다. 부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인사를 나누게 될 때 반가움이 더 커진다. 2학년 때는 회장단이 되어서 더 많은 친구들과 풋사랑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

김우승
글로벌대학위원회 부위원장

#혁신 #벽 허물기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로 시동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15개 모델이 발표되었다. 향후 5년간 30개 각 추진 대학(단독, 또는 공동)에 1,000억 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166교 중 108교가 신청하는 등 지역대학의 생존을 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오는 10월 말 본지정을 앞두고 글로벌대학위원회 김우승 부위원장을 만나 사업의 취지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로벌대학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벽 허물기’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가장 먼저 교수진부터

대학의 변화를 이끌며 벽 허물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향후 10~15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지난 3월부터 이 프로젝트가 출범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없이는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없고,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 10월 말의 본지정을 앞둔 글로벌대학은 지자체, 지역 산업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글로벌대학 예비지정학교 15개 추진모델이 선정·발표되면서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지난 6월 20일 있었던 예비지정학교 선정결과 발표는 글로벌대학위원회 김우승 부위원장의 브리핑으로 진행됐다. 발표 이틀 뒤인 23일 오전, <행복한 교육> 취재팀은 김 부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실에서 마주 앉을 수 있었다. 올해 2월 말에 한양대학교 총장 임기를 마친 김 부위원장은 기계공학자이자 산학협력 전문가로 국가산학협력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다수의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사회는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안 고등교육의 눈부신 성장으로 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위기감마저 제기되고 있고요. 대학교육의 전통적 수요층이 급감하면서 지방의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대학위원회에서는 이 위기 탈출의 해법을 글로벌대학의 새로운 모델들이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글로벌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가 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되지요.”

이번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에는 비수도권에서 신청대상이 되는 대학 총 166개교 중 108개교가 참여했다. 65.1%라는 높은 참여율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지역대학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학 스스로 대변환을 꾀하고자 하는 의지이자 실행의

“글로벌대학은 지정되는 30개 대학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그 첫 번째 목적이다.”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곧 본지정이 진행될 글로벌 대학이 추진해야 할 중점방향은 크게 2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혁신’과 ‘벽 허물기’다.

“글로벌대학은 지정되는 30개 대학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대학의 추진모델은 학문·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 간, 국내·외 사이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대학-지역-산업 간 혁신을 가로막는 벽 허물기는 대학개혁의 핵심요소예요. 글로벌대학은 향후 대학개혁의 선도자로서 다른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대학이 그 지역의 롤 모델 대학이 되는 것이지요.”

김 부위원장은 “혁신과 벽 허물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번 글로벌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국내는 물론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글로벌대학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벽 허물기’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라면서 “가장 먼저 교수진부터 대학의 변화를 이끌며 벽 허물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업의 ‘구체성·진정성·지속가능성’ 평가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는 기존의 여타 정부 지원

사업방식과는 다르게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의 방식이 중앙으로부터의 하향식 지원이었다면, 글로벌대학은 현장으로부터의 상향식 제안방식을 택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별 특성과 지역 여건이 상이함에도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진단했다. 또 “공모 시 사업 신청서 작성에 많은 행정력을 소모해 온 반면에 지역발전 및 대학의 혁신과는 무관한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어 오다 보니 사업비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측면도 존재해 왔던 게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곧 대학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는 미흡했던 측면이 노출됐던 만큼 글로벌대학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15개(+4) 대학은 9월까지 지자체, 지역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에는 “사업의 구체성, 진정성,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실천 가능성이 무엇보다 잘 드러나야 한다.”라며 김 부위원장은 이를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앙정부사업비에 대한 매칭 정도의 재정영역에만 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가 연결되어 협력해야 하는 이번과 같은 방식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주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위원회에서는 해당 영역에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그룹을

매칭하여 계획 수립부터 지정·평가·지원 등 추진 전 과정에 걸친 컨설팅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전문가로서 ‘실용학문을 바탕으로 한 산학연 고도화’를 늘 강조해 온 김 부위원장. 산학연계 교육·연구·인적교류 등 세 가지 형태의 산학협력 중에서도 특히 산학 간 인적교류는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대학은 향후 맞춤형 진로취업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전공과 연계된 기관(기업체)과의 MOU를 통한 글로벌대학 현장실습 제공-채용 연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들려줬다.

“시스템 구축으로 성과관리 투명하게 공개할 것”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는 향후 성과관리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지역사회에 기여한 정도와 영향력을 분석하는 평가방식을 성과관리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매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추진 3년 차와 5년 차에는 더욱더 강도 높은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해외 대학은 이미 대학의 지역사회·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영향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하여 분석 결과를 해마다 공개합니다. 이로써 대학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대학도 이처럼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투명한 성과공개를 위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AI와 에듀테크로 대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소회를 들려줬다. 우선은 “대학에서의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역



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바로 글로벌대학 추진사업과 같은 ‘교육 혁신’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IC-PBL(Industry-Coupled Problem/Project-Based Learning) 같은 교육플랫폼이 그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IC-PBL은 산업체와 지역사회, 대학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산업체(Industry)는 이공계에 국한된 전통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전공과 연계된 기관(사회) 전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언급하며, 비이공계열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였다. 지난해 유네스코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인증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김 부위원장의 주도적인 설계로 2017년부터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도 일반교과 강의에서 시행해 오고 있다. ⑦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현재 한국 사회는 학령기 인구감소와 함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방대학과 지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성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은 대학을 키우고 대학은 지역의 혁신을 이뤄내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혁신중심의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하며, 지방대학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여기서는 정부의 RISE 구축 및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을 소개하고, 고등교육의 과제는 무엇이며, 대학의 개혁을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지역 거점 평생직업교육으로 거듭나고 있는 전문대학과 대학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대학, 해외의 지자체-대학-지역 산업체 간의 협력사례 등을 살펴본다.

Special Theme

- 12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 16 미래, 고등교육을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
- 19 전문대학, 지역 거점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거듭나다
- 22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 26 대학 내외부 벽 허물고 대학개혁 선도하는, 글로벌대학
- 30 해외의 지자체와 대학의 성공적인 협력사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임계점에 달하는 수도권-지방 양극화

우리나라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쏠림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데, 인구로 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19년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 비중을 넘어섰다. 대기업 본사의 75%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상위 1% 근로소득자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직장에 다닌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단시간에 달성한 나라이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인구의 급격한 감소 같은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수도권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교통, 환경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교육 문제도 그중 하나이다.

대학은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에서 4년제 대학 164곳에서 1만 8,000여 명을 채우지 못하는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다. 경쟁력을 잃은 84개 한계대학 가운데 62개(74%)가 비수도권에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예상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김영삼 정부의 지방자치 확대와 도농통합 정책이 그 하나이다. 노무현 정부는 2014년까지 150여 개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추진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경제권과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현상은 ‘저출생,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3중고 속에 226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라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의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정의가 실현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그중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과 대학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둘째 지역대학-지자체-지역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설치한다. 셋째, 지역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특히 지방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해진 느낌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구축’과 비수도권 대학 30여 개를 선정해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해 ‘세계적인 지역대학’을 만든다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이 대표적인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자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볼 수

경직된 학과중심, 전공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 방법·내용·제도 등에서
학과 단위 전공을 벗어난 유연한 학사구조,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능동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있다. 글로벌대학 사업은 6월 20일 15개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했고 본지정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만으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하기 어렵다. 그것은 대학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국토 균형발전, 지방소멸 방지, 지방대학 건강성 회복 등을 위해 대학의 혁신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한다.

대학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코로나19, 급격한 인구감소는 대학의 역할과 교육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 경직된 학과중심, 전공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 방법·내용·제도 등에서 학과 단위 전공을 벗어난 유연한 학사구조,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능동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4가지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인 동시에 국토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 대학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은 ‘나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은 사회적 재교육 기능(직업전환교육),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양교육으로 나뉠 수 있다. 대부분의 직

업 주기가 10년 이내로 짧아진다고 하는 시기에 대학은 국민이 평생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 가야 한다.

둘째, 대학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가령 경상국립대는 경상남도 내에 캠퍼스를 두어야 한다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전국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과도 학점교류·학사교류·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캠퍼스를 지역에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부산시-경상국립대-동명대가 협력하여 부산시 동명대 캠퍼스 부지에 경상국립대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부산분원을 건립하는 사업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셋째, 대학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도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우수인력을 대학 신입생으로 유치해야 한다. 고급인력의 유입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특히 중소기업 산업인력과 농산어촌 노동인력의 교육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과 교양교육, 직업소양교육을 제공하는 일을 지역 중소 규모 대학이 맡아야 한다.

넷째, 대학은 ‘전공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몇백 년에 걸쳐 고착화한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의 벽을 허물고 학문 간의 연결과 융복합을

국가거점국립대학은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상생·협력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을 추동하는 주체이다.

추진해야 한다. 마이크로 디그리(나노 디그리)를 포함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사 제도의 도입, 학생 중심의 교육 등이 그것이다. 경상국립대는 학과나 전공의 장벽이 없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 대신 스스로 교과목을 설계하고 자기 주도적 활동을 수행하여 교양 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는 ‘개척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로지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학과 수업에서 얻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상국립대의 대표적인 혁신학사제도로 자리 잡았다.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2개 이상(우선이수전공 포함 가능)의 전공에서 교과목을 조합하여 단일주제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우선이수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우선이수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학사제도는 전공이나 학과, 공급자인 교수 중심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기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상국립대에서는 ‘학생선택형 시간강의’, ‘유니버시티 시간선택형 강의플랫폼’, ‘시간은행제 학점취득’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실현가능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2000년대 초반 서울대학교를 폐지하자는 주

장이 있었다(폐지론).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우수 학생을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반성에 기반한 주장이다. 그 후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왔다(하방론). 2021년 캘리포니아 대학과 유사한 모형으로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지방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모두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22년 2월 경남 사천에서 열린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총회에서 국회교육위원장, 교육부 차관과 서울대를 비롯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모형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와 연계한 국가거점국립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는 방안이다.

경상국립대는 교육부가 공모한 5쪽짜리 글로벌 대학 혁신기획서에서 실현가능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모형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5대 핵심 산업 이면서 경남의 4대 전략산업, 경상국립대의 특성화 분야인 ‘우주항공대학’을 설립하고 서울대와 우주·항공 분야에서 공동강의, 학생 파견, 학점 및 학사 교류, 공동학위 등을 양 대학 총장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에 착수했다.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하는 데 서울대와 동반 성장하는 경상국립대의 우주항공

대학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실현가능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이 특성화해 온 분야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서울대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동반 성장 모델이다. 경상국립대가 처음으로 그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의 주요한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모두가 산다

국가거점국립대학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 사상과 정신, 산업과 경제, 법률과 행정 모두를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상생·협력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을 추동하는 주체이다. 대학의 물리적·제도적 경계를 허물어 대학의 시설과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상국립대는 2021년 7월 진주시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캠퍼스를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 공간으로 제공하는 시민행복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 평생학습원과 협력하여 고학력 퇴직자의 사회 재참여를 촉진하는 평생교육사업과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기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대학의 담장을 허물어 지역민이 캠퍼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민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다. 나아가 소멸지역인 서부경남의 전략산업을 발전시키고 경남정신과 연계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경상국립대는 2023년 2월 창업의 소프트웨어인 창업중심대학 사업(467억/5년), 4월 창업의 하드웨어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453억/3년), 그리고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그린 바이오벤처 캠퍼스 사업(339억/4년, 공동운영기관), 6월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로써 경상국립대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창업 정신 제고 및 교육사업을 모두 갖춘 국가거점국립대학이 되었다.

한국경영학회는 2018년 진주시를 ‘한국 기업가 정신 수도’로 지정하였다. 이는 삼성, LG, GS, 효성 등 진주 출신 기업가들이 남명의 경의사상을 바탕으로 사업보국, 국리민복, 인재제일, 인화경영,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적극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경상국립대는 K-기업가정신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서부경남에 남명정신과 K-기업가정신에 기반한 담대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도시, 창업 정신이 넘쳐나는 지역으로 변모해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자체-대학 협력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국토 균형발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미래, 고등교육을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학문적 창의성과 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대학의 역량을 소모적인 규제행정의 대처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행·재정적 낭비는 물론 대학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헌법적 가치이며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률이 아닌 정부의 훈령, 예규, 고시 등의 각종 행정규칙이나 지침, 행정지도를 통한 지도·감독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학에 대한 규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며 원칙적으로 ① 타율적 규제에서 자율적 규제로 ②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③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④ 임의 규제에서 법적규제로 라는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규제개선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사립대학(법인)의 재산관리의 자율성을 대폭 제고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융복합 교육의 확산, 비약적인 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 활성화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1996년에 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대한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다.

본고에서는 현 정부하에서 추진된 교육부 규제개선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교육부 규제개선 동향

첫째, 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 자율성을 대폭 제고하였다.

2022.6.15.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사립대학(법인)의 재산관리의 자율성이 대폭 제고되었다. 종전에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 보전이 필요했으나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은 교비회계 보전, 세금납부로 규제하고 있었으나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립대학이 수익용 재산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해졌다.

둘째, 대학 정원 규제가 완화되었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정원 자체조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이 폐지되었다(「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2023.1.10.). 그 외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설립 4대 요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2022.8.9.)

셋째, 학사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종전에 원격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일반(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여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고등교육법」 개정 2022.10.18.). 또한, 종전에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은 외국대학과 공동 운영과정만 허용하였으나 첨단분야는 국내 일반대학에서도 단독·공동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2022.9.29.).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제’가 도입되었고,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 상호 연계 운영 대상을, 당해 대학 외에 국내 다른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과도 연계를 허용하였다(「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23.4.18.)

넷째, 대학 설립 4대 요건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 중이다.

종전에는 대학의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 간 거

리가 2km 이하인 경우에만 단일교지로 인정하였으나 20km로 확대하고 각각의 교지가 동일 시·군·구내에 있으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되었다(「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2022.8.9.).

아울러 1996년에 제정되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온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2022.12.30.~2023.2.13., 추가 개정안 2023.3.17.~4.26.).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한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대학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은 설립기준(현행 유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여 설립 후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4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일부 학과의 새로운 캠퍼스로의 이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며, 대학 간 자발적인 통폐합 추진을 위해 통폐합 시 일률적인 정원감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향

첫째, 과잉규제의 원인이 되는 의원입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작년 11월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이며 의원발의 입법이 271건, 정부입법이 33건으로 10건 중 9건은 의원입법으로 나타났다. 의원입법의 문제점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규제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과잉규제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역대 정부가 규제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10년째 1.5만 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는 규제를 없애려 노력하지만, 과잉 양상된 의원입법으로 인해 끊임없는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주요 국가 의원 1인당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법안이 최종 법률에 반영되는 비율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 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과잉입법으로 인한 규제 법률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발의 규제입법에 대해서는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를 위한 출입국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20만 명에 이르며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4만 명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지난해 총인구 5,162만 명 대비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곧 우리나라도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0년에는 1979년의 인구 수준인 3,766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70년에는 1,73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의 한국경제를 유지하려

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정주하여 국내에 필요한 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과감한 출입국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주를 희망해도 까다로운 체류요건으로 인해 비자를 갱신하지 못하고 귀국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미충원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에 필요한 인재로 활용함으로써 미래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체류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대학에 대한 모든 규제는 대학 스스로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이 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는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사 운영은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기본사항만 법령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창의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하는 공식·비공식적인 학사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의 국내외 통용성 확보나 대학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전체 대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협의체가 대학 합의를 토대로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등 최소 공통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대학협의체의 학사 자율규제’를 도입한다고 하였다. 미래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되며 학사제도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 시설관리, 대학 정원 관리, 입시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대학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㉞

전문대학,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거듭나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대학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소재 전문대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에, 지자체마다 지역 내 성인학습자 교육을 강화하면서 지역특화 분야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전문대학이 지역밀착형 고등직업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돌파구를 찾고 있는 전문대학 사례를 소개한다.

전남 과학대학교 **스마트팜 특화된 청년농부 육성하는 ‘두레21’**
인구 2만 7천여 명의 지역소멸 우려 지역인 곡성군에 소재한 전남과학대학교는 곡성군과 함께 ‘두레21’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두레21’은 농촌에서 힘든 노동을 함께 나누는 풍습인 ‘두레’와 21세기의 합성어로 곡성군과 전남과학대가 지역소멸 위험과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남과학대는 지역특화 분야인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농공플랜트 전문가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에너지관리·전기·용접·지게차·굴착기기능사 등 6개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 지역주민과 산업체 재직자, 청년, 귀촌·귀농인, 생애전환기 신중년 등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80여 명이 수강하고 수료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드론을 융합하여 드론방제 및 시설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적 다기능 스마트팜 시설·설비 전문가 양성과정인

(사진 제공 = 전남과학대학교)



1 스마트팜 교육과정 특강견학



2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견학

지자체는 지역특화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 산업 일자리와 인력수요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여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조성했다.

‘농공플랜트 드론과’를 신설했는데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36명이 지원하면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전문대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광주, 군산, 전주, 광양, 순천, 여수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 지원자가 절반을 차지하면서 신설학과를 통해 청년농부 육성과 청년층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운영 목표에도 부합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다.

전남과학대 HiVE센터 조영훈 담당은 “홍보를 많이 못했지만, 지역주민들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도 스마트팜 교육과정에 대한 문의가 많다. 사업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우려는 분들이 많은 듯

하다. ‘농공플랜트 전문가양성 과정’은 전액 국고로 진행되기에 더 많은 분이 관심을 두는 것 같다.”라면서 스마트팜 교육을 계기로 젊은 청년들이 곡성군에 많이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림성심대학교
커피특화도시 특색 살린 ‘맞춤교육’에 집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자리한 한림성심대학교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대학 입학생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고등 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지자체는 지역특화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 산업 일자리와 인력수요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여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조성했다.

춘천과 홍천지역이 커피특화도시로 주목받으면서 커피와 제과제빵 관련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자 현황을 조사하여 일자리 수 및 인력수급 전망을

(사진 제공 = 한림성심대학교)



3 2023 한림성심대학교-춘천시-홍천군 HIVE 컨소시엄 성과공유회



4 디지털 미디어콘텐츠강의

예측했다. 대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바리스타제과제빵과’와 ‘디지털미디어콘텐츠과’ 두 개 학과를 신설하고 산업체 취업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을 시작했다.

2023년 기준으로 ‘바리스타제과제빵과’에는 40명, ‘디지털미디어콘텐츠과’에는 29명 총 69명의 신입생이 신설학과를 통해 입학하면서 학교 분위기에도 활기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학과 수료생 중에는 카페를 창업하거나 본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도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선 학교 안팎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바리스타제과제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카페를 창업한 한 수료생은 “교육과정도 재미있고 취업과 창업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서 큰 도움이 됐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강원도립대학교
대학-지자체-산업체 3자협약… 신입생 정원 100% 모집 달성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던 강원도립대는 지자체(양양군·고성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특화 분야 인재양성과 지역 청년 정주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자체, 지역주민, 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화 분야를 ‘해양레저’, ‘호텔관광’, ‘오션뉴딜’로 선정하고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과’, ‘호텔관광과’에 대해선 교육과정 개편을 단행했다. 한편 ‘오션뉴딜’ 분야인 선박관리·선박조종·마리나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를 신설, 2024년도에 첫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기존 두 개 학과의 경우 맞춤



5 강원도립대학교 사업추진 방향

형 학사조직·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한 후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레저스포츠과’ 40명, ‘호텔관광과’에는 25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면서 정원 100%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대학 내 평생직업교육을 통해서도 지역특화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데 2022년 기준 해양레저전문가 82명, 호텔관광전문가 33명, 오션뉴딜전문가 24명 등 총 139명이 대학 내 평생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업에서 활약하고 있다.

강원도립대 재정지원사업(HiVE) 정유선 파트장은 “양성된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을 위해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3자 협약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주율도 지속해서 높여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 배경

’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이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 지방은 지역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으로 지역과 대학이 공동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AI, 챗GPT 등 기술의 혁신은 인재와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의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선 지역 산업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이 양성하고, 대학에서 양성한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여 지역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다.

RISE의 필요성과 방향

RISE는 지역과 대학 공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은 중앙부처에서 개별 사업별로 지원하게 되어 지역별 특성과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따로따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서로 연결되기도 어려웠다.

RISE는 산학협력이나 지역혁신,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산업과 지역사회 수요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한 기존 사업들을 통합하여,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 방향에 맞춰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지역에서 교육, 일자리, 산업, 문화, 복지 등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정주를 위해선 교육이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지역과 연계된 대학지원으로 대학이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 ‘지역산업이 필요한 기술지원’, ‘지역주민이 필요한 교육·문화’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나아가 대학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허브로 발전이

지역-대학-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이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산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상생과 동반 성장의 생태계 구축이 RISE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역-대학-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이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산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상생과 동반 성장의 생태계 구축이 RISE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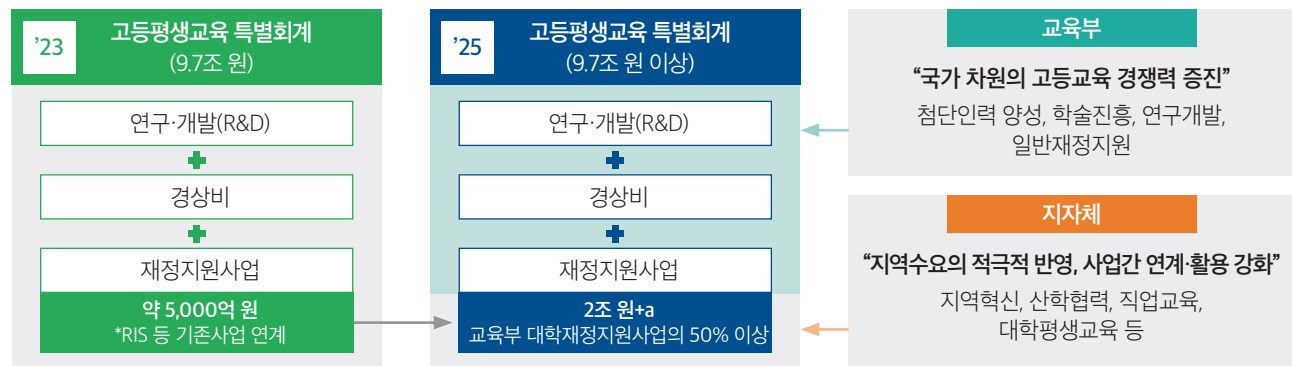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기존의 학령기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성인 학습자 교육과 같이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ISE체계 구축

RISE체계 구축을 위해선 시도로 지원되는 RISE 재정과 지역주도의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산학협력, 지역혁신, 직업교육, 대학평생교육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거나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사업들을 우선 통합하여 지자체 주도로 지원할 수 있게 전환한다. 2023~2024년은 지자체 주도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부터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2025년에는 교육부의 목적성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방향

그림 1 - 2025년 이후 RISE 통합 예산(안)



RISE 도입과 관련하여 시도의 대학업무 경험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전담부서와 전담기관을 충실히 갖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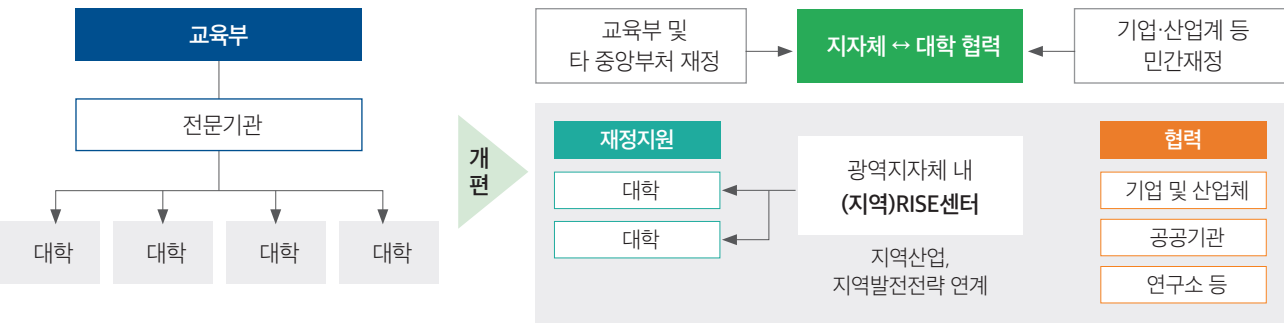
역량확보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도로 전환되는 재정사업 대상과 규모, 지자체로의 배분 기준과 성과관리 방안 등은 정책연구와 함께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그림 1 참조]

RISE체계에서 시도는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대학지원계획(RISE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을 지원하게 된다. 이때, 지역은 중앙부처의 다양한 재정지원과 자체 지원 사업들을 연계하여 RISE 계획을 세우고, 필요시 RISE센터를 통해 집행하여, 지역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RISE가 범정부 대학지원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RISE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지자체의 대학지원 관련 역할이 크게 확대되는 면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충분한 조직과 인력,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RISE 구축을 위해 먼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RISE 예산을 집행·관리하여 지역 내 대학을 지원하는 지역 RISE센터(전담기관)를 지정 또는 설치해야 한다. RISE센터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만큼 충분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지역 연구원, 테크노파크, 평생교육진흥원 등 시범지역('23~'24)의 RISE센터 운영 경험과 결과가 다른 시도의 지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ISE 도입과 관련하여 시도의 대학업무 경험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전담부서와 전담기관을 충실히 갖추고

그림 2 -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안)



RISE 도입

역량확보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2 참조]

또한 지역의 RISE 계획 추진과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지역별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내외부의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지원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ISE는 대학지원체계의 큰 변화인 만큼,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으로 RISE 모델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거쳐 2025년 전 시도에 도입할 예정이다. 2023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의 7개 시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RISE 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구축 등을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2025년 차질 없이 RISE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글로벌대학 육성 및 규제혁신

RISE 생태계에서 대학-지역-산업 간 혁신을 가로막는 벽 허물기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촉진하는 글로벌대학을 지정·육성한다. 글로벌대학은 '26년까지 30여 개를 지정할 계획이며,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학협력, 과감한 구조개혁, 평생학습·창업·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혁신 모델을 마련하여, 다른 대학들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선진국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ISE는 교육부와 시도, 대학이 함께 대학지원체계를 전환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시범지역을 포함한 지자체, 관계부처, 대학 등이 서로 힘을 합쳐 RISE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로 도약하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②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15개 혁신기획서 선정

대학 내외부 벽 허물고 대학개혁 선도하는, 글로벌대학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들은 학문·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고 대학과 대학 간의 벽을 없애는 한편,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계와의 경계를 허물어 협력을 통해 상생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6월 20일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15개의 혁신기획서를 선정·발표하였다. 글로벌대학 신청에 총 108개교가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으며, 그중 27개교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94개 글로벌대학 혁신기획서에는 급격한 인구·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산업계와 함께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고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향에 부응하며 교육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벽 허물기 등 다양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

이번에 제출된 94개 글로벌대학 혁신기획서에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고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향에 부응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

글로벌대학위원회는 대다수 대학에서 △무학과·무학년·무전공 등 학문·학과 간 벽허물기 △대학-지자체-연구소-기업 간 벽 허물기 △유학생 유치 등 국내외 간 벽 허물기 △개방형 대학 거버넌스 혁신 등 기존 대학 운영의 공식을 혁파는 과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글로벌대학’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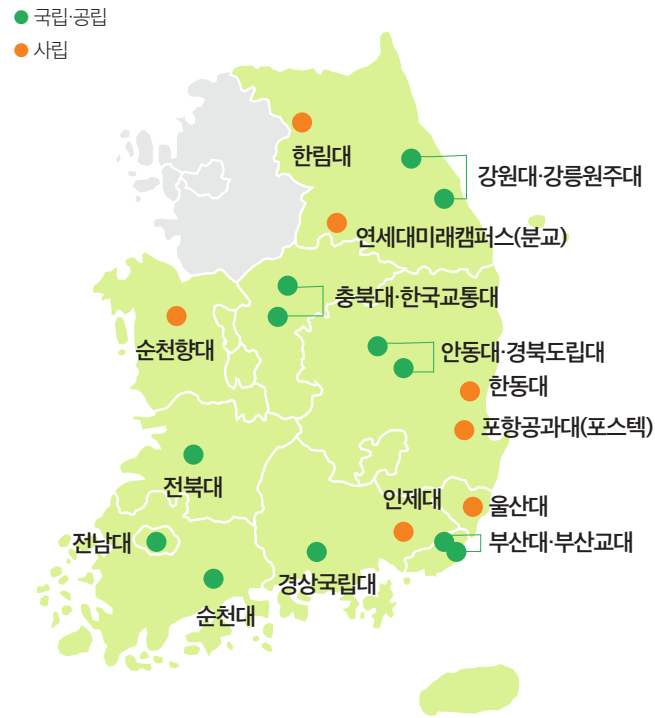
강원대·강릉원주대 는 대학 간 벽을 허무는 통합을 통해 캠퍼스 간 공유·연합·통합을 촉진하는 초광역 단위의 ‘1도1국립대’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두 대학은 ‘지역밀착형 특성화 캠퍼스’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문화, 산업 등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강릉(신소재, 해양

표 - 2023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가나다 순)

	대학명	구분	지역	유형	핵심 방향
1	강원대·강릉원주대	공동	강원	국립/국립	벽을 허무는 통합을 통한 1도1국립대 구축을 통해 지역 밀착형 캠퍼스 구현
2	경상국립대	단독	경남	국립	경남 전략 산업인 우주항공·방산 분야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대학 구축
3	부산대·부산교대	공동	부산	국립/국립	유·초·중등·특수·평생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NEW 종합교원양성대학 구축
4	순천대	단독	전남	국립	중소기업, 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특화 분야 강소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혁신 대학 구축
5	순천향대	단독	충남	사립	학제와 교육 대변혁을 통해 학생들의 메가 선택권이 구현되는 학생설계형 대학 구축
6	안동대·경북도립대	공동	경북	국립/공립	국공립대 통합 및 전통문화 기반의 인문 특성화를 통해 공공목적 통합대학 구축
7	연세대 미래캠퍼스(분교)	단독	강원	사립	보건·의료 및 시산학융합 지구 개발을 통한 데이터 중심 미래형 대학 모델 구축
8	울산대	단독	울산	사립	지역산업육성펀드 1,000억 조성, 미래 신산업 대학원 신설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대전환을 견인하는 지산학일체형 대학 구축

	대학명	구분	지역	유형	핵심 방향
9	인제대	단독	경남	사립	도시의 모든 공간을 교육과 산업 생태계로 활용하는 All City Campus 구축
10	전남대	단독	광주	국립	AI 융복합 혁신 허브인 광주캠퍼스와 신기술·첨단산업 혁신 벨트인 전남캠퍼스 특성화로 초격차 글로벌 혁신 대학 구축
11	전북대	단독	전북	국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반으로 새만금거점 대학·산업 도시 구축을 이끄는 전북 플래그십 대학 구축
12	충북대·한국교통대	공동	충북	국립/국립	공유→연합→통합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공유·협업을 통합 관리하는 혁신 플랫폼 대학 구축
13	포항공과대	단독	경북	사립	지역전략산업 혁신 및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첨단기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학 및 공학 분야의 글로벌 연구혁신 대학 구축
14	한동대	단독	경북	사립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100% 무제한 보장하는 제약없는 융복합 교육 기반의 문제 해결형 원칼리지 구축
15	한림대	단독	강원	사립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을 선도하여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형 AI 대학 교육 모델 구축

그림 - 2023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



생명·관광, 천연물바이오산업 분야)을 지학연합력 거점으로, 춘천(정밀의료, 바이오헬스, 데이터산업 분야)을 교육연구 거점으로, 원주(디지털헬스케어, E-모빌리티, 반도체 분야)를 산학협력 거점으로, 삼척(액화수소, 에이징 테크, 재난방재 분야)을 지역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체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한다. 각 캠퍼스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연계된 캠퍼스별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경상국립대 는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우리나라 최대 집결지인 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방산 허브 대학’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지난 2021년 3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통합 후 단과대학 신설·폐지, 유사·중복학과 통폐합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인 경상국립대는 이번 혁신기획서에서 대학 통합과 캠퍼스·단과대학 간 장벽을 없애는 과감한 구조개혁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유개방형 대학 등으로 우주항공대학과 IT

공대를 설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좌캠퍼스의 항공우주공학, 칠암캠퍼스의 기계소재공학, 통영캠퍼스의 스마트에너지기계공학을 통합해 2025년까지 우주항공대학을 설립하고 서울대 등 국내외 대학, 연구소, 산업체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대·부산교대 는 융합·디지털·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유·초·중·등·특수·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 교원양성대학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두 대학은 학습자 주도의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양교육을 공동 운영하며 비교과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디지털, AI, 빅데이터 기반의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해외 파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비교원을 글로벌 인재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또한, 부산대는 세계적 수준의 의생명·바이오 융합연구 및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산캠퍼스를 R&D 혁신클로스터로 개편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산캠퍼스 부지(39만여㎡)를 활용하여 의생명·바이오 관련 분야를 이동 배치하고 융합과학기술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융합교육·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순천향대 는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10개 단과대, 50개 전공을 폐지하고 △생애 전 주기형 5년제 학·석사 과정 △단기 집중형 3년제 학사 과정 △융합 혁신형 4년제 학사 과정 △실전 창업형 5년제 학·석사 과정 등 새로운 교육 체제인 4개 유니버시티·15명 이하 40개 소전공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학생들의 강좌 및 교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산업체·연구기관 전문가 300명을 초빙하고 모든 교원을 학과(전공) 소속 없이 전면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동대 는 14개 학부를 통합하고 100% 전공 선택권을 무제한 보장하는 ‘문제 해결형 원칼리지 대학’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한동대는 모든 경계를 허무는 교육혁신을 위해 융복합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무제한 과목·전공 조합이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 교육과정도 개발하는 한편, 미네르바대학과 교양 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 수익용부지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 지배구조) 스타트업 혁신타운으로 조성하고 울릉도에 캠퍼스를 설립하여 글로벌 그린리딩기업과 연계한 울릉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울산대 는 울산 도심과 주력 6개 산업단지에 멀티 캠퍼스를 조성해 산업 현장 맞춤형 시공간 초월형 캠퍼스를 조성하고, 총 1천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육성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학부 정원을 15% 감축해 대학원 정원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남대 는 AI 융복합 혁신 허브인 광주캠퍼스와 신기술·첨단산업 혁신 벨트인 전남캠퍼스 특성화로 초격차 글로벌 혁신 대학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중국 온주 국제캠퍼스, 베트남 하노이 바이오클로스터 등 64개국 456개 대학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원·학생 교류, 공동학위 등을 추진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순천대 는 중소기업, 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특화 분야 강소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혁신 대학 구축을 제안했다.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과감하게 학과 통폐합과 단과대를 폐지하는 순천대는 그린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의 3개 특화 분야에 대해 무학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무학년, 무학기제를 추진한다.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들은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10월 중 최종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채택된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해외의 지자체와 대학의 성공적인 협력사례



대학은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및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인구감소로 인한 곤경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대학이 크게 영향을 받았으나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과 협업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지자체와 대학의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소개하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한다.

해외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사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볼티모어 지역개발(도시재생)프로그램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볼티모어 지역개발(도시재생)프로그램(Johns Hopkins University: The East Baltimore Development Initiative)은 볼티모어 시청, 메릴랜드주, 기타 연방기관과 민간기관으로부터 20년간 180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아 동부 볼티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EBDI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거 파크(Eager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혁신에 나선다면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Park) 개발 프로그램은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부근의 우범지대였던 Eager Park를 존스홉킨스대학의 기관과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지역 내에 존스홉킨스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존스홉킨스 테크벤처스와 액셀레이터인 패스트포워드가 입주하였으며 대학원생 전용 주택도 지역에 건설하였다. 또한, 레지던스, 스타벅스, 카보비레스토랑 등 유명 상업시설이 입주하였고, 약 192개의 소매업체가 입주 중이며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한 주택도 민간기업을 통해 건설하였다. 이제 이곳은 창업지원기관과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을 재생하여 지역과 대학의 혁신이 결합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EBDI 프로젝트의 성과로는 퍼킨스 홈스(Perkins Homes)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1,345개의 주거 단위가 건설되었다. 또한, 헨더슨 홉킨스 학교(Henderson-Hopkins School)를 신설하면서 2015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독해능력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지는 등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향상되었다. 또한, EBDI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 테크시티(Tech City)

영국 테크시티는 영국 내에서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성장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테크시티는 원래 쇠퇴한 City Fringe에서 Tech City로 성장한 것이다. 'City Fringe'는 런던의 도심인 시티지역에서 약 2km 떨어진 지역으로 도심 외곽을 뜻한다.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런던시는 2003년부터 런던지역에 3개의 창조경제계급(패션, 보석가공, 가구디자인)을 육성하는 창조도시 육성사업을 시작하면서 런던 왕립대학, 런던 시립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의 연구 기관들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연구와 창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R&D센터와 창업보육센터, 관련 서비스 기업 등이 연구와 창업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런던 시내에 위치한 주요 대학 등은 지식창출의 근원이 된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투자, 비즈니스 지원, 교육 등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전문학교(Digital Business Academy)'의 경우 2014년 11월에 설립된 UCL(런던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역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지역 성장에 있어 가장 유망한 산업을

발전시킬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대학교)을 포함하여 캠브리지 등과 연계하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으로서, 2016년 현재 2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며, 1만 1천 번 이상의 트레이닝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Digital Business Academy’ 통해 55개의 디지털 기술 유니콘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60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통하여 테크시티 성장의 발판이 되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스웨덴 말뫼시와 말뫼대학교

‘말뫼의 눈물’로 잘 알려진 스웨덴 남부 도시인 말뫼는 한때 조선업으로 번창했다가 한국과 중국의 조선업에 밀려 2000년대 초반 주력 업종이 몰락하면서 일자리가 25% 감소하는 등 도심이 쇠락한 지역이다. 말뫼시는 시장과 기업·노조·학계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한 협의체를 꾸려 1990년대 중반부터 위기를 준비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논의 끝에 나온 답은 창업 기반 확충,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 대학 설립이었다.

사업 초창기에는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말뫼시의 적극적인 추진력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더해지며 말뫼의 도시재생 사업은 성공할 수 있었다. 수적 지표로 본다면, 1990년 23만 명이었던 도시 인구는 10만 명이 증가하여 현재 총 34만 명이다.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7만 개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며 친환경 도시재생의 모델로 유명해졌다. 공장 건물은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로 조성해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으로 지원하여 6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변모하면서 ‘말뫼의 기적’이라는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일본 규슈지역과 규슈대학 협력

일본도 한국과 유사하게 지역의 대학들이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이 동시에 경제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지방·중소규모 사립학교(340개) 중 절반 정도인 162개 사립대학이 적자경영 상태에 있다. 도시·중소규모의 사립대학(195개)의 경우에도 약 40% 가까이가 적자경영으로 조사되었다. 2032년 학령인구가 약 2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학진학자 수가 대폭 감소하여 존폐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다. 규슈대학은 연구자와 민간기업의 연구자 간 개별적 협력관계를 공식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켰다.

규슈지역의 지자체 유치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 실적은 2012년의 429건, 8,900만 엔에서 2018년에는 687건, 1억 2,100만 엔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규슈대학이 독자적 벤처창업제도를 도입하여 87개의 기업을 육성하여 대규모 벤처캐피탈 자금지원이 있는 오사카대학 101개, 교토대학 142개에 비해 성과가 뒤지지 않은 창업 결과를 창출하였다. 최근에는 규슈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재도약을 위하여 구마모토 내에 TSMC 공장 건설을 유치하여 전체 투자액의 40%인 4,760억 엔을 지원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을 꾀하고 있다.

지자체-대학 협력 강화해 지역위기를 기회로

이상 외국의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혁신에 나선다면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지자체와 대학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자체와 대학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은 상호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단기간의 성과지표와 중장기적인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운영해야 한다.

둘째,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원한다고 또는 지자체가 원한다고 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셋째,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은 유연성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역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지역 성장에 있어 가장 유망한 산업을 발전시킬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㉞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벌대학'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역할

국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인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세계적인 양자도약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9개의 국가거점국립대학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를 포함하여 'KNU-10'으로 지칭한다. 'KNU-10'은 지금, 이 순간도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국가거점국립대학은 설립연도와 설립재원은 제각기 다르지만, 1945년 해방 이후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46년, 부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국가거점국립대학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부터, 이들 거점국립대학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특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지역의 인재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0년대 이후, 이들 국가거점국립대학에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공이라는 공공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책무성이 부여되었다.

RISE 체계 도입으로 더 중요해진 국가거점국립대학

그사이 급속하게 진행된 생산인구와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위기와 지방대학 위기를 촉발시켰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 중에서 85곳이 비수도권이었고, 신입생 미충원 대학의 75%가 지방대학으로 보고되었다. 많은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을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대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입학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령인구와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거시적 환경 속에서, 지방대학 시대를 정책과제로 제시한 현 정부에서는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 체계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는 지방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과 지방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이자 플랫폼이다. 이미 2023년 RISE 시범지역으로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이 선정되었고, 2025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산한다. 지역과 협업해야 지방대학이 성장할 수 있고,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핵심 기관으로 수용해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지역혁신플랫폼사업(RIS사업),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사업) 등이 RISE 체계 속에서 운영된다. 올해 10개가 선정되는 글로벌대학 사업도 RISE 체계와 무관하지는 않다.

9개 지역이 모두 수행하고 있는 지역혁신플랫폼사업(RIS사업)은 대학교육혁신본부가 국가거점국립대학에 설치되며, 작년까지 선정된 지역의 RIS사업 총괄운영센터도 국가거점국립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얼마 전 예비선정된 15개 글로벌대학 예비후보에 국가거점국립대학인 부산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총 6개 대학)가 포함되었다. 국가거점국립대학이 지역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역인재, 지역에서 공부·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경쟁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국립대학 및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에 기반한 공동의 노력과 성과는 지속되고 있다.

2021년, 대학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처분 시 처분 수익금을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시켜 대학의 발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대학회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동 법률에서는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경우에도 국유재산으로 간주하여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입했다. 대학의 재원이지만 자체적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국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구조였다. 국립대학 총장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 지속적으로 법률개정을 촉구하여 해당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 부산대는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국립대학의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써 동 법률개정을 최초로 제안하고, 교육부와 함께 국회를 설득하는 등 법률 개정애 앞장서 왔다.

부산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 지역보다도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다. 2020학년도 188명에서 2021학년도에는 263명으로 증가시켰으며, 2022학년도 504명, 2023학년도 611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시키고 있다. 현 정부의 지역인재-취·창업-지역정주라는 지역혁신 생태계 구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온 셈이다. 지역의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의학계열의 신입생 모집에도 적극적인 '지역인재전형' 확장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다. 지역인재의 1차적인 지역이탈을 감소시키고 지역정주를 증가시키기 위한 모범적인 입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산대는 지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의 2차 지역이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인재채용의무제의 개선'을 도모해 왔다. 기존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의무제 30%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건에 대해 지방대학을 대표하여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전지역 내의 한정된 졸업생만 이전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들의 인적자원 다양성 정책과 기관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30%는 이전지역 내 졸업생으로 20%는 비수도권 지역 졸업생으로 채용(총 50%)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지역인재채용의무제 개선을 국회에 제안하였고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혁신과 국가발전의 중책 담당

올해, 부산대는 KNU-10(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 회장교로 선출되어 국가거점국립대학 공동발전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인재채용의무제 개선, 국립대학법,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거점국립대와 국공립대를 비롯한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정책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립대학과 지방대학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함께 지역혁신과 국가발전의 중핵대학으로서의 부산대의 담당한 도전도 계속되고 있다. 2023년 한 해,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 결과,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사업(500억 원),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328억 원, 4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75억 원, 3년), 글로벌대학 지원사업(1,000억 원+알파, 5년, 예비지정), RIS 사업(2,145억 원, 5년, 총괄대학) 등 굵직한 재정지원사업을 빠짐없이 수주하였다. 이러한 재정지원 사업의 특징은 국가거점국립대학인 부산대만의 발전에 국한되지 않고 작게는 지역 대학과 지역의 공동발전과 혁신, 크게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대학설립 취지와 국가거점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걸맞은 재정지원사업의 선정은 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의 협력과 공유 성장이라는 대의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해선 정부-대학 공조 필요

세계적인 대학 육성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되는 유일무

이한 정책은 없다. 세계적 대학이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갖추도록 촘촘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대학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공조를 이루어야 한다. 지역혁신과 국가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남부권 서울대학' 육성이라는 가능한 대안을 현실화하려는 정부와 대학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국가거점국립대학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도 견인할 수 있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역 중심 정책 지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발적인 대학혁신을 통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방대학 혁신과 발전을 위한 넛지(Nudge)에 반응하는 민첩한 역량과 능력이 요구된다.

KNU-10의 협업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지역혁신정책과 인류, 국가, 지역을 위한 공동의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시점이다. 산업계에서는 독립조직 간 경쟁이 아닌 공유조직, 제휴조직 간의 경쟁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 이미 오래다. 국가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임계수준(Critical Mass)의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선진국가에도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는 규제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인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세계적인 양자도약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⑦



지역혁신과 국가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남부권 서울대학'
육성이라는 가능한 대안을 현실화하려는 정부와
대학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충청북도교육청

전국 최초의 놀이교육지원센터 ‘놀이’로 성장한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설립한 ‘놀이교육지원센터’가 놀이교육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사업 준비기간 3년, 총사업비 58억 8천만 원이 투입되어 올해 4월 정식 개관한 놀이교육지원센터는 충주시 대소원면 옛 대소원초등학교 건물을 재단장해서 놀이교육지원센터와 학부모성장지원센터, 강당과 식당으로 활용이 가능한 2개의 별관, 그리고 4개의 실외모험놀이 시설을 조성했다. 흠놀이, 책놀이, 자연놀이, 메이커놀이 등 50가지 이상의 즐거운 놀이가 샘솟는 놀이교육지원센터를 찾았다.



쌓는 보람보다

무너뜨리는 즐거움을 응원하는 곳, 레고

“여러분, 레고가 ‘재미있게 놀다(Leg Godt)’라는 뜻의 덴마크어인 것 알아요? 레고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재밌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 싶은 100년 뒤의 집과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봐요!”

놀이 강사가 ‘와르르’ 공간에서 삼삼오오 모여 있는 아이들에게 놀이 시작을 알리자 아이들도 손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상상 속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

“커다란 바퀴가 부착된 신발을 신고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를 개발하겠어.”, “나는 정원에 꽃이 많이 피어있는 나만의 드림하우스를 만들 거야.”,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상상해봤는데 응용해서 집을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아.”, “그래, 해보자!” 청주 봉명초등학교에서 찾아온 6학년 학생들이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놀이 강사의 역할은 설명하고 가르치기보다 아이들의 흥미가 나아가는 방향을 지켜보다가 약간의 도움을 주는 지원군에 가깝다. 놀이의 규칙과 진행 방법은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이끌어간다.

10개 놀이공간에서 50가지 이상의 놀이프로그램 체험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삶을 배운다. 즐거움, 규칙, 배려, 협동, 실패와 좌절, 성공 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 지난 4월, 놀이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놀이가 샘솟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놀샘터’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놀이교육지원센터는 전국 최초의 공공 놀이교육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폐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놀이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센터와 강당, 실외시설을 건축하고 2022년 10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운영은 올해 4월부터지만 사전에 운영했던 파일럿 프로그램과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는 차이점이 없다. 2021년부터 2년간 충청북도 도내 교사 10여 명을 워킹그룹으로 초청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놀샘터 놀이프로그램’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이 자료집을 기반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놀샘터 놀이프로그램 자료집에는 조물락·책이랑·맘껏뚝딱·땀범벅·실컷뚝딱·와르르·한판더·요리조리 등 10개의 공간 특성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50가지 이상의 놀이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다.

개관 준비부터 놀샘터를 이끌어온 김현식 팀장은 “각 공간의 명칭들은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놀이와 관련된 직관적인 단어로 지었다. 놀이공간에는

- 1 놀이공간 ‘와르르’에서 레고 놀이에 참여한 봉명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 2 폐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한 놀이교육지원센터 전경
- 3 놀이교육지원센터 1층에 있는 ‘책이랑’ 공간에서는 책읽기는 물론, 책을 도구로 활용한 다양한 만들기 활동도 체험할 수 있다.

오리고, 찢고, 찢고, 부수고 등 놀이 활동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문구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면서 ‘해보자’가 가치를 발휘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놀이문화 확산 위해

마을학교·교사연수 프로그램도 운영

놀이교육지원센터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더 많은 학교, 학생,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학교를 잇는 놀이’와 ‘지역을 잇는 놀이’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를 잇는 놀이’는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최대 176명)이 센터로 와서 놀이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과 놀샘터 소속 놀이 강사 6명이 관련 교구를 준비해서 학교로 찾아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해 운영 중인데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예약이 완료될 만큼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청주 봉명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인솔하고 온 김재원 교사는 “우리 학교는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높고 같은 언어권 학생들끼리만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이곳에서 다양한 세계놀이도 체험해보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어울릴길 기대했다. 그런데 실제로 언어 문제로 함께 놀지 않던 친구들이 놀이를 매개로 융화되어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이후에도 학교로 찾아오는 프로그램이나 교구대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역을 잇는 놀이’의 경우 마을학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동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주말과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에는



- 4 2층 ‘실컷뚱뚱’ 공간에서 페키보드와 페마우스를 활용하여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학생들
- 5 ‘조물락’ 공간에서 <찰흙으로 상상의 동물 만들기>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 6 ‘놀샘나눔’ 공간에서 자연놀이 수업이 진행 중이다.



‘놀샘터 놀이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방문객들이 30여 개의 놀이 부스를 방문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놀샘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놀이문화 확산과 지원에 있다. 이 때문에 센터로 직접 찾아오기 힘든 학교와 교사들을 위해 도내 교사연수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학기 중에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놀이 연수를 진행하고, 방학 때는 전문가 초청 강의 중심의 하루 또는 3일 연수를 진행한다. 올여름에는 놀이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선생님과 교실 놀이’, ‘놀이로 푸는 학급 경영’,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놀이’ 등을 주제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 고민도 해결해줄 예정이다.

놀이교육지원센터는 놀이를 통한 건강한 관계 형성과 자유로운 소통문화가 학교와 교육공동체에 확산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놀샘터’에서만 만날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

놀이교육지원센터는 공간과 환경에 따라 약 50가지 이상의 다채로운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읽기’ 빼고 책으로 놀기

책읽기를 싫어하거나 책을 읽는 데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도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읽기’보다는 ‘책’ 자체를 놀잇감으로 삼아 놀아보는 책놀이 활동

✔ 화분케이크 만들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학교 급식 메뉴들의 탄소 쿼트로 재료를 획득, 나만의 화분케이크를 만드는 요리활동

✔ 폐책으로 트리 폴딩북 만들기

폐책을 활용하여 크리스마스트리 폴딩북을 만들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아보는 책공예 놀이활동

✔ 나도 보드게임 메이커

‘탐색·설계·시제품 제작·보완’의 과정을 통해 나만의 보드게임을 만드는 활동이다.

Interview



미래교육 ‘놀이’에 답이 있다

놀이교육지원센터 김현식 운영 팀장(교육연구사)

Q 올해 운영 목표는?

전국 최초의 놀이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 개원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보장과 놀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해 고민과 연구를 많이 했고, 놀이공간과 프로그램 기획에 고민의 결과물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실수해도 즐거운 놀이교육지원센터의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들은 자신의 사고가 무한히 확장되는 해방감을 느끼고, 미래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교사에게는 영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

Q 운영상 어려움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프로그램을 확장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팀은 운영 팀장과 파견교사를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족한 인력을 해결할 방안을 찾으면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인력 충원은 필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놀이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흠뻑 놀이에 빠져들 수 있는 바깥 놀이시설과 맘을 식힐 수 있는 휴식 공간 등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Q 놀이교육지원센터의 공적인 역할은?

단기적인 역할은 놀 수 있는 환경조성과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놀이문화가 확산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선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짧은 시간 내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놀이교육지원센터는 지속해서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놀이프로그램을 발굴·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의견을 나누면서 알차게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달의 교육뉴스

vol.492 2023 JULY

01. 공정한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은 수능에서 배제하고, 현장 교사 중심으로 수능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EBS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는 등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확대하고,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 등을 통해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한다.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 초등 입학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늘리고, 체육·예술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이 외에도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사교육 카르텔 근절에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02. 올해 40개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

올해 약 40개의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개의 사업을 공모·선정한다. 교육부는 올해 공모사업을 공고하고,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관리·운영비 및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준공 후 시설을 운영하는데,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해서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로,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예체능·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3. 새롭게 개편한
4세대 나이스(NEIS) 개통

교육정책과 모바일기기 이용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4세대 나이스(NEIS)' 서비스가 시작됐다. 4세대 나이스에는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시 맞춤법 검사 지원, △학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 기관 출결·성적 입력 시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별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해 학생이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과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와 성적을 조회하고 방과 후 활동, 교외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04. 복권기금 1차 SOS 장학생
300명 선발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발굴해 대학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1차 에스오에스(SOS) 장학생에 300명을 선발했다.

이번 1차 SOS장학생 신청기간 동안 전국 중·고등학생 총 1,359명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심층평가를 거쳐 위기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 30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은 총 10개월간 매달 30만 원씩 장학금을 받으며, 6월부터 진로상담 등 교육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05. 기초학력 증진-교육선택 기회 확대로
공교육 정상화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또한,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됐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유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강화한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성과평가 과목 확대에 따른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제들을 보완하여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한 학생맞춤 교육,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을 추진한다.

06. 대구시 청년 1,000명,
월 24만 원으로 주거 해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해 공동으로 거주하는 대구 행복기숙사가 개관했다. 기숙사 수용인원은 1,000명이며, 시비 등 총 448억 원을 지원하여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준공했다.

대구 행복기숙사 건립으로 이곳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관리비를 포함한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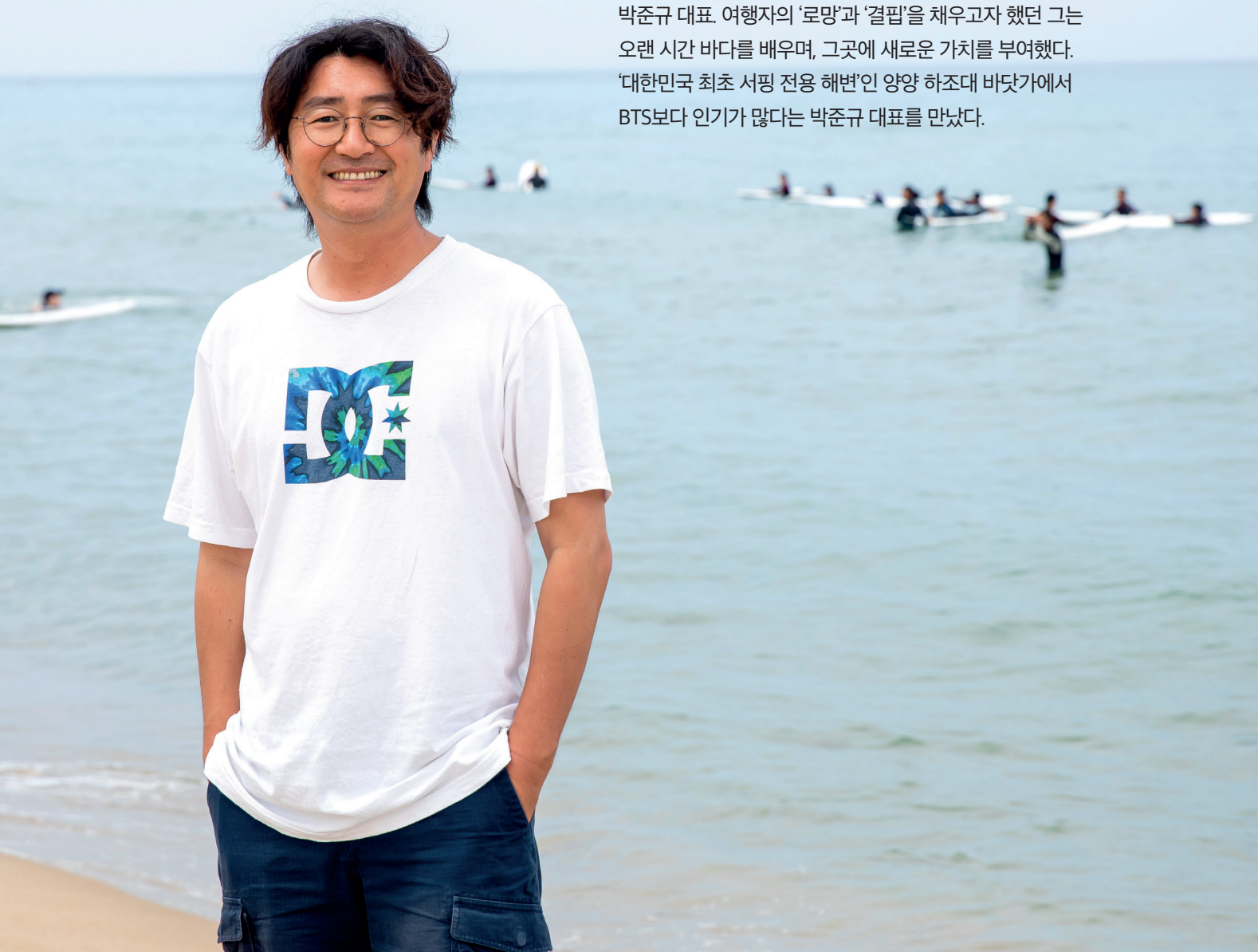
기숙사비 24만 원으로 주거비 해결이 가능해진다. 지자체 또는 대학 추천 시 월 19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대구 행복기숙사는 주민 친화형 기숙사를 목표로 카페, 편의점, 구내식당, 휴게공간 등 다양한 내부 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형 주차장을 운영하여 지역 내 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

로컬 크리에이터(지역가치창출가)
박준규 서피비치 대표

여행자의 ‘로망’과 ‘결핍’을 채우는 바닷가를 기획하다

지역 문화, 관광 및 자원을 비즈니스모델에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로컬 크리에이터, 박준규 대표. 여행자의 ‘로망’과 ‘결핍’을 채우고자 했던 그는 오랜 시간 바다를 배우며, 그곳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최초 서핑 전용 해변’인 양양 하조대 바닷가에서 BTS보다 인기가 많다는 박준규 대표를 만났다.



Local Creator

SURFYBEACH 강원도 양양 하조대 바닷가에 도착하자 먼저 환영하는 건 트로피컬 하우스 음악.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며 해변에 들어서니 노란 나무 팻말의 ‘SURFY BEACH’가 인사한다. 한쪽으로 늘어선 서핑보드와 곳곳에 놓인 파라솔과 빈백, 태닝존, 그리고 디제잉 부스가 보이는 선셋바, 서핑강습 중인 사람들. ‘어? 여기가 한국이라고?’ 마치 외국의 유명한 해변을 보는 듯한 느낌의 서피비치. 군사지역으로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다 40년 만에 개방한 청정해변을 ‘대한민국 최초 서핑 전용 해변’으로 재창조한 이는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다.

이제 양양 바닷가는 연간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자, 서피비치 선셋바에서 열리는 일몰 후 파티에는 많게는 하룻밤에 1,500명이 참여한다. 여름만 찾는 바닷가라는 오명을 벗고 1년 내내 찾을 수 있는 바닷가를 기획한 그가 여행자들의 ‘로망’과 ‘결핍’을 채운 결과다. 광고기획자로 부산 해운대에서 광고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박 대표의 경험과 실패, 오랜 기다림으로 탄생한 서피비치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 환경과 문화적 자산에 혁신과 창의성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박준규 대표와의 일문일답.

하나,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그간 해온 일과 과정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고 일을 하면서 운 좋게 프로젝트를 해운대에서 진행하게 됐는데, 그 일이 멋있어 보여서 서울 일을 그만두고 그곳에서 3년을 머물렀다. 그러면서 바다와 관련된 법률들을 확인하고 배웠다. 이후 강원도 강릉에 출장을 왔다가 문득 깨달았다. 해운대는 관광지로서 많이 발전했는데 내가 고등학교를 나온 강릉은 그에 비해 뭔가 아쉽다는 거였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에 강원도로 오게 됐다. 바다에서 할 수 있는 레저로 서핑을 선택하고 서핑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니 양양이었다.

서피비치는 3단계로 진행됐는데, 처음엔 서핑 전용 해변으로

- 1 일몰 후 파티가 열리는 서피비치 선셋바
- 2 서핑 전용 해변으로 서퍼들을 위해 비치된 서핑보드





허가받는 게 어려워 바다와 떨어진 곳에서 4년간 허가를 준비하고, 5년째에 해변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후 여러 번의 전략 수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됐다. 이렇게 되기까지 9년이 걸렸다. 현재 서피비치에서는 서핑은 물론 페스티벌 같은 주야간 콘텐츠를 제공한다. 제휴사는 28개에 이른다.

둘, 양양의 서피비치는 현재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힌다. 지역 상품으로서 서피비치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어떤가?

서핑을 할 수 있는 바다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 해안은 굴곡이 저서 침식되고 퇴적되고 하는데, 얕은 곳에서 파도가 인다는 것을 알게 됐고, 양양을 찾

게 됐다. 기획할 때부터 여행자들의 로망과 결핍을 반영하고 그것을 우리 스타일대로 해결하고 공감을 얻으면 사업이 성공한다고 생각했다. 우선 관심을 받는 분야로 바다는 제격이다. 누구나 바다에 오니까.

특히, 여행은 대전제가 있는데 바로 ‘약속’이다. 1년 내내 언제 오든 비슷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강원도는 여름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1년 내내 준비해 놓고 맞이하겠다는 약속, 이제는 여행객들이 이 약속을 믿고 이곳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갔을 때 느낄 법한 것들,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거나 주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는 것 등을 해변에 적용하여 여행자들의 로망을 충족시킨 게 아닐까 생각한다.

지역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서 실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3 9년에 걸쳐 대한민국 최초 서핑 전용 해변을 만든 박준규 대표
4 전국 서퍼들이 찾는 명소가 된 양양 바닷가



셋,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그간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을 때는?

보람과 성취감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고객, 동료, 지역에 이득이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느낀다. 이곳에서는 매주 제휴사가 여는 파티가 열리는데, 800석 규모에 약 1,000~1,500명이 모인다. 입장권도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파티라 회사에 소득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오신 모든 분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다.

특히, 서피비치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역의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라, 이는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가 노력을 쏟는 일이 무엇이든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자체에 큰 보람을 느낀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갈 때가 있다. 초창기에서는 누구도 밥값을 안 냈다. 각자 내거나 이장님이 내셨는데 지금은 서로 밥값을 내려고 하신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지역주민들도 많이 알아주고 반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넷,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궁극적인 역할은?

지역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서 실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업

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 바란다면 이곳을 찾는 모든 여행객에게 사랑받는 것이다.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이라 믿는다.

다섯, 미래의 직업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편한 도시가 아닌 왜 시골에서 살까’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시골을 선택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도시 삶이 안 맞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 덜 벌고 윤택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현재 경험이나 자연 속 삶을 동경하는 경우다. 그리고 나처럼 지역에 사업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서비스업은 관심-이해-공감 3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인 관심이 어렵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일을 해야 하는데, 로컬 크리에이터의 경우 자연이 이를 대신해준다. 그러나 이해 단계에 이르기가 어렵고, 공감하는 모수가

도시보다 적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인지 계속 고민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

흔히 서비스업에서는 마케팅이나 상권 등을 보고 관심 단계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지역 자연을 기반으로 하니까 사업이 성공하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실패할 확률은 낮다.

마지막,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6살 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미래에 행복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이다. 10대의 삶이 공부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나. 나는 교양있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교양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양하다는 걸 인정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청소년들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좋겠다. 그렇게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면 어느 순간 기회가 온다. ㉠

TIP BOX

로컬 크리에이터 진로 TIP!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하여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브랜드, 제품, 공간, 커뮤니티 공공재 등 유·무형을 포함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다뤄 관심 분야가 넓으면 유리하다. 대학 관련 전공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광고와 홍보 관련 지식과 실무능력을 쌓아두면 좋다.



한국 속 작은 독일

남해독일마을

1960년대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겨우 벗어난 가난한 나라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을 벗어나 보려고 젊은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 파견을 자원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그들은 백발이 되어 귀국했다. 고국에서 여생을 편히 쉬기 위해 선택한 땅은 남해 바다와 일출이 보이는 삼동면 물건리 산비탈. 그들이 독일 건축 양식으로 손수 지은 보금자리가 지금의 독일마을이다.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왜 독일행을 선택했을까. 당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였다. 실업난이 심각했으며 나라 경제를 살릴 돈이 없었다. 차관을 빌리기도 어려웠다. 마침 독일은 복지 정책이 막 확대되던 때라 간호사와 기피 업종인 광부가 매우 부족했다. 정부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는 조건으로 차관을 빌리는 데 성공했다.

1963년 파독 광부 모집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 광부 300명 모집에 46,000명이 지원했던 것. 지원자 중에 고학력자도 많았다. 파독 광부 월급이 국내 사무직 월급보다 10배 정도 많았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해 시험과 체력 검사를 통과해야 선발될 수 있었다. 어렵사리 독일에 도착한 그들 앞에 현실은 냉혹했다.



독일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독일광장, 관광안내소, 기념품숍, 독일음식점 등이 있다.

파독 광부들은 1,200m 깊이의 갱도에서 작업했다. 지열로 뜨거워진 공기와 석탄 가루를 마시며 50kg이 넘는 장비를 사용해야 했다. 장화를 거꾸로 세우면 땀이 물처럼 쏟아졌다. 어린 파독 간호사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시체를 닦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일을 도맡았다. 파독 근로자 상당수가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생계비만 남기고 모두 고국에 보냈다. 그 돈은 형제자매의 학비로, 부모의 논밭 구입비로 쓰였다. 국가적으로는 1963년부터 1975년까지 파독 간호사 13,000여 명, 파독 광부 8,000여 명이 벌어들인 외화가 경제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다.

- 1 남해독일마을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남해파독전시관
- 2 파독 광부의 애환이 담긴 '광부의 한' 막대기
- 3 파독 간호사 고 우춘자씨의 하이드하우스
- 4 남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조성된 남해독일마을



아름다운 남해에 스며든 독일 문화

2000년부터 독일마을 건설이 시작됐다. 귀국을 희망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남해군이 분양한 땅을 사고, 독일에서 건축자재를 들여와 전통 독일 양식으로 집을 지었다. 전깃줄을 지하에 묻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살려 작은 독일을 완성하는 데 6년이 걸렸다. 산비탈에 쪼르르 늘어선 주황색 삼각 지붕 사이로 남해의 푸른 바다와 산과 들녘이 펼쳐진다. 뜨거운 햇살 아래 주황과 초록의 대비가 싱그럽다.

독일마을 입구에는 독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상점가가 조성돼 있다. 언덕길에 독일 수제 맥주, 소시지, 독일식 돈가스 ‘슈니첼’, 독일식 족발 튀김 ‘슈바인 학센’ 등 독일 음식을 파는 식당과 카페, 독일 마켓 등이 즐비하다. 상점 건물도 모두 독일풍이다.

언덕을 더 올라가 상점가를 벗어나니, ‘독일마을’이 새겨진 표지석이 보인다. 표지석 뒤로 파독 근로자와 가족들이 사는 주택 43채가 그림처럼 자리했다. 이 중 30여 가구가 부업으로 민박을 운영한다. 집마다 문 앞에 ‘파독의 집’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집 이름, 집주인 이름, 독일 근무처, 자기소개 글

을 적어 놓았다. 발길이 멈춘 집은 고인이 된 파독 간호사 우춘자 씨의 ‘하이드하우스’. 그녀가 독일인 남편과 알프스 소녀처럼 살겠다는 소망을 담아 지은 이름이었다.

독일마을 A to Z 남해파독전시관

독일마을의 핵심 공간은 마을 꼭대기에 있는 독일광장이다. ‘도이처플라츠’라고 불리는 이곳에 ‘남해파독전시관’이 있다. 독일 파견 역사, 독일마을 조성 과정, 파독 근로자의 기증품 등을 전시한다. 지하 갱도를 재현한 전시관 통로를 지나며 파독 광부들이 지하 1,200m 갱도에 들어설 때의 절박함을 느껴본다. 광부들은 매일 아침 갱도에 들어갈 때마다 ‘글뤽아우프(Glück auf 살아서 돌아오라)’를 외쳤다고 한다.

전시실에는 월급 명세서, 파독 광부가 광산에서

사용했던 작업 도구와 작업복, ‘코리아 엔젤’이라는 찬사를 들은 파독 간호사들의 의료기기, 가운 등이 걸려 있다. ‘광부의 한’이라는 설명이 붙은 막대기가 눈길을 끈다. 막대기에 한글, 한자, 영어, 독일어가 빼곡히 적혀 있다. 광부들이 몸이 아프거나 고국의 제사에 가지 못해 마음이 아플 때마다 한풀이 하듯 한 자 한 자 적어 넣은 것이라고. 글자를 해석할 수 있다면, 구구절절한 사연에 가슴이 먹먹해질 것 같다.

파독 근로자들이 기증한 생활용품들 통해 독일에서의 일상을 엿본다. 고국의 가족 또는 연인과 주고받은 편지, 파독 간호사가 독일인 남편과 결혼할 때 입은 웨딩드레스, 틈틈이 파놓은 각종 자격증, 책, 집이 그리울 때마다 하나씩 사 모은 향수들, 찻잔 세트 등에 그리움이 가득하다. 영상실에서 ‘독일로 떠난 젊은이’ 영상을 보며 이들의 애환을 짐작해 본다. ②

남해파독전시관

📍 위치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89-7
☎ 문의	055-860-3540
🕒 관람 시간	09:00~18:00(월요일 휴관)
🎫 관람료	1,000원



1893 시카고 만국박람회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부 산광역시가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에 도전한다. 대전, 여수 등에서도 세계박람회가 열린 적이 있지만, 그것은 19세기부터 개최되어 온 만국박람회의 전통을 계승한 등록박람회는 아니었다. 등록박람회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제로 삼아 최대 6개월간 무제한의 규모로 전시할 수 있지만, 인정박람회는 등록박람회 사이에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로 열린다. 부산이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과 경쟁을 벌여 2030 세계박람회를 주최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등록박람회가 될 것이다.

만국박람회, 근대 세계의 빛과 그림자

엑스포라고도 불리는 만국박람회는 유럽과 미

국의 열강이 세계를 상대로 자본주의 근대화의 힘을 과시하는 무대로 출발했다. 1851년 처음으로 만국박람회를 개최한 곳은 그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던 영국의 런던이었다. 그 뒤를 이어 프랑스 파리가 여러 차례 만국박람회를 개최하고, 미국도 1893년 시카고에서 화려한 만국박람회의 문을 열었다.

당시 한반도에는 아직 독립 국가인 조선이 있었다. 1876년 불평등한 강화도조약 체결로 일본에 의해 근대 세계로 끌려 들어간 조선은 서둘러 근대 세계의 독립적 일원이 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만국박람회에서 조선의 존재와 근대화 의지를 알리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주요한 일환이 될 수 있었다. 일본이 1873년 빈 만국박람회에서 일본 선품을 일으키며 성공을 거둔 것은 좋은 선례였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광화에서 빛·나이다' 점등식 (2023. 4. 4.)

조선이 처음 얼굴을 내민 국제 박람회는 1883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기술공업박람회였다. 미국에 사절단으로 간 보빙사 일행이 이 박람회에 들러 비공식적으로나마 조선의 물품을 소개했다. 물론 기술공업박람회는 만국박람회보다 규모가 작은 주제별 박람회였다. 조선이 처음 참여한 만국박람회는 1889년 프랑스대혁명 100주년을 맞아 열린 파리 엑스포였다. 여기서는 민영환의 동생 민영찬을 보내 몇 가지 물품을 선보이는 데 그쳤다.

파리 엑스포는 만국박람회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무대였다. 철골 구조로 세워진 324m의 에펠탑은 돌로 만든 오벨리스크, 피사의 사탑 정도를 높은 건축물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프랑스 국기의 삼색 불빛으로 밤을 밝히는 에펠탑은 전기가 대표하는 근대 과학 문명의 위력을 잘 보여 주었다. 에펠탑이 빛이라면 '흑인 마을'이라는 전시장은 그림자였다. 살아 있는 유색인 400명을 종족별로 나눠 관람객 앞에 세워 놓아 '인간 동물원'이라는 말도 들었다. 유럽인과 비유럽인의 문화적, 인류학적 차이를 보여 준다면 성행하던 '인간 동물원'은 당대를 풍미하던 인종주의의 산물이었다. 이는 열강이 추구하고 있던 식민주의 정책의 본질을 드러낸 사례가 아닐 수 없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지닌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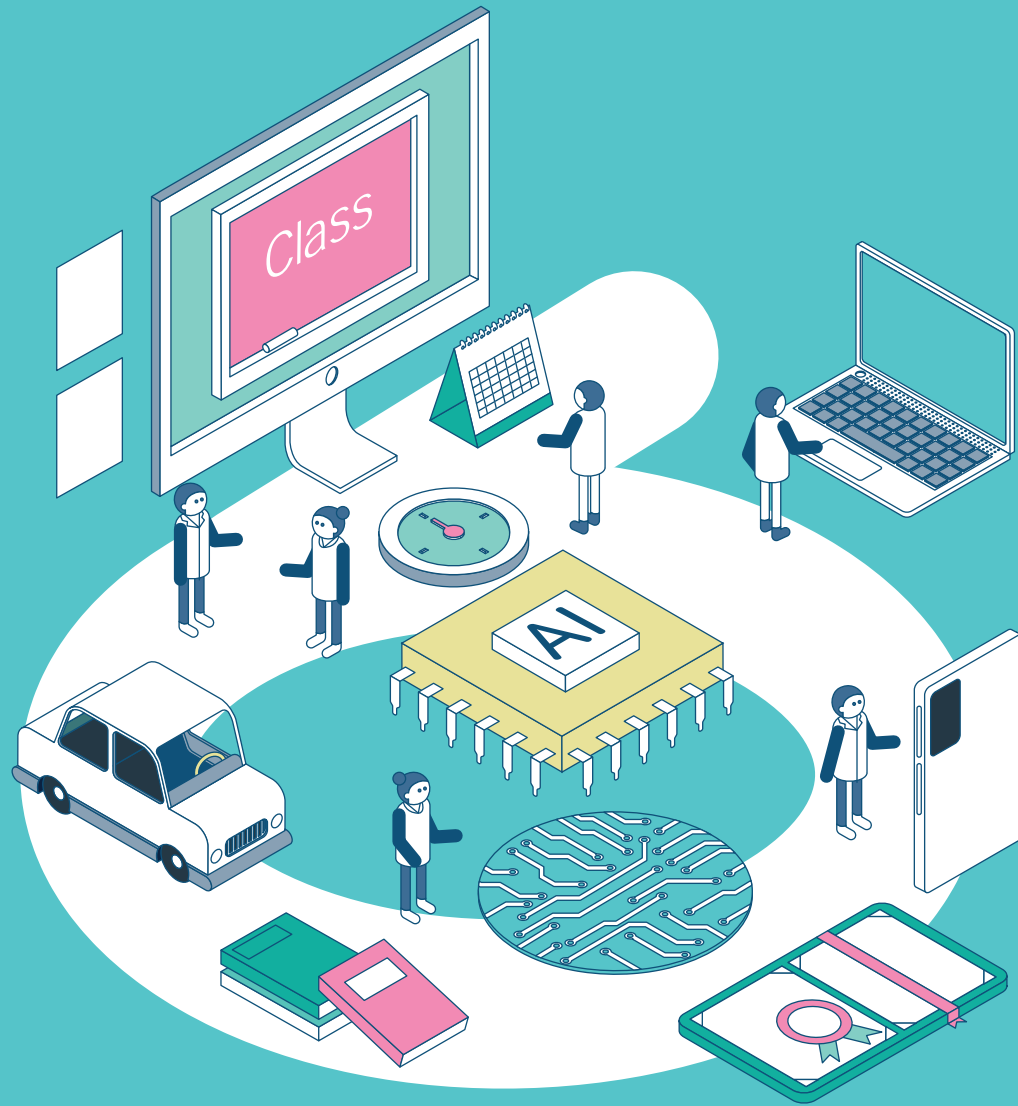
조선은 1893년 5월의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처음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박람회의 한 전시관인 '제조와 교양관' 한쪽에 태극기를 걸고 수공예품과 전

통 의복, 일상용품 등을 전시했다. 전통 음악도 연주했다. 미국 언론이 호기심을 보이고 수공예품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근대 산업 국가의 면모를 보여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본이 계속해서 선품을 불러일으킨 것과 비교하면 더욱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근대 국가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고종은 3년 후 파리 만국박람회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넓은 대지에 경복궁 근정전의 모습을 본뜬 목조 건물을 지어 독립적인 '대한제국관'을 꾸렸다. 이 아름다운 건물은 방문객의 시선을 끌고 대한제국의 존재를 알리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문제는 7년 전과 마찬가지로 수공예품 위주에 머물러 있는 전시 품목이었다. 근대화의 성과를 보여 주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대한제국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이후의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지만 곧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고 독립 국가로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당대의 만국박람회가 보여 주던 근대 세계의 빛과 그림자 가운데 확연한 그림자의 길로 들어선 셈이다.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개최한다면 올림픽, 월드컵 등과 더불어 지난날의 아픔을 떨치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정을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무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산의 도전은 성공 여부를 떠나 초기 만국박람회의 빛과 그림자를 되돌아보고 그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좋은 계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②

인공지능 수업 시리즈 ④

6학년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윤리 이야기

인공지능 수업 시리즈

- ① 초등 교실에서 시작하는 인공지능 수업 ② 우리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그랬어요!
③ 사람과 대화하는 인공지능, 수업에서 써도 될까요? ④ 6학년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윤리 이야기

인공지능을 개발하자는 쪽과 지금이라도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자는 쪽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찬반 양쪽의 쟁점을 다룬 두 번의 인공지능 윤리 초등수업의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자동차 발명을 둘러싼 논쟁과 쟁점들

1860년 벨기에 태생의 프랑스 발명가 에티엔 르누아르가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을 발명했다. 그리고 곧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길에 등장했다. 사람들은 말보다 조금 더 빠른(때로는 더 느린) 속력으로 달리는 시끄러운 기계 덩어리(자동차)를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었다고 한다.

- 이것은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것일까?
- 마차가 훨씬 조용하고 빠르며 비용도 적게 드는 데다 매캐한 연기를 맡지 않아도 되는걸!
- 이것이 나옴으로써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

그러나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금세 말의 속도보다 빨라졌으며, 1913년 미국의 기업인이자 기술자인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자동화를 이룩해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부들의 일자리와 사람들이 치어 다치거나 죽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물론 조용해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동차를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을까? 19세기 사람들은 자동차를 계속 개발하기로 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자동차는 성능과 비용 면에서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만약, 1860년 이후에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또 자동차가 사람들을 치어 다치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비용과 성능과 같은 문제뿐 아니라 마부의 일자리와 자동차 사고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달리는 자동차가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떠올려보자.

여기서 잠깐!

수업에서는 현재 인공지능 윤리로 거론되는 문제들을 과거 유사한 사례에 비추어 아이들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한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학생: “자동차 부품이요!” “안전장치요!”

그렇다. 뺏으면 바로 멈추는 브레이크, 안전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조향장치, 범퍼와 에어백, 보행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클랙슨, 부딪혔을 때 차체와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범퍼와 같은 기계적인 안전장치를 먼저 떠올릴 수 있다.

학생: “신호등이요.” “교통경찰이요!”

그리고 신호등과 방향 표지판, 중앙선 또는 보행자와 차량이 나뉘어 다닐 수 있는 잘 정비된 도로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운전자와 보행자 각각에 맞는 교통 법규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적정 속도와 스쿨존 등 변화되는 도로 상황을 반영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교육도 필요하다. 가령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살펴보자.

브레이크가 고장 난 무인자동차의 선택에 따라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다친다. 혹은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혹은 다치게 할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정할 권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인공지능 윤리를 정하기 위한 이야기에 참여해야 한다.

그럼 인공지능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자. 그들의 주요 주장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개발을 중지하든가 속도를 늦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기술 발전은 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높였다. 인공지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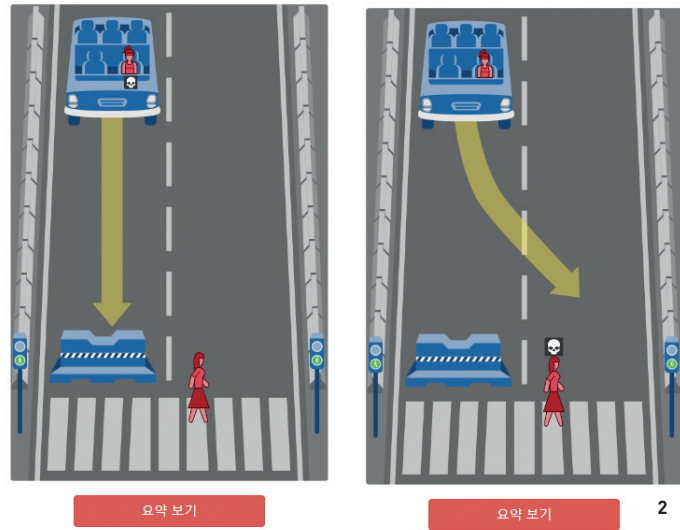
학생: “마부 대신 더 많은 운전자가 필요해진 것처럼 인공지능이 대체한 일자리 대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발을 중지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말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 어떨까? 오늘 수업의 주제가 인공지능 도덕, 법, 규칙이 아니라 윤리라고 부르는 까닭은 바로 이것이다.

- 1 내연기관 발명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를 논의해보는 학생들
- 2 출처: www.moralmachine.net/hj/kr



무인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2

우주 쓰레기 논쟁과 개인정보보호

이번에는 우주로 간 유인우주선을 생각해보자. 최초의 우주 쓰레기는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지구 궤도에 진입하면서 이 위성을 싣고 간 30m에 달하는 거대한 로켓이었다. 1957년 10월 4일, 이날이 인류가 우주에 처음 쓰레기를 버린 날이다. 이후 50년 동안 우주로 버려진 물체는 임무가 끝난 인공위성을 비롯해 우주비행사가 놓친 스펀너, 크고 작은 부속을 비롯해 수도 없이 많다.

우주 쓰레기의 양은 매우 많고, 그걸 청소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이득도 당장은 없지만, 미래에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할 능력이 있거나 우주 쓰레기 되가져오기 사업에 동참한 나라들만이 우주 개발권을 주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 없는 어떤 것, 즉 우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나마 가능한 대답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것이다. 바로 우주 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 오면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해결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데이터가 크게 의미가 없었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는 꼭 필요해졌다. 내가 선호하는 음악이나 가수를 쉽게 찾아주는 유튜브 추천 영상이나 서둘러 로그아웃한 사이트의 장바구니가 다음에 접속할 때까지 남아있는 이런 기술의 편리함은 그곳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동의가 어디까지인지, 개인정보의 침해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과 개인, 국가가 생각하는 범위가 각각 다를 수도 있다. 개인도 사람에 따라 어디까지의 편리와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개발 속도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접점을 찾기 위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탐색의 끝은 우리가 시작했던 곳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그곳을 처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 시인 T.S.엘리엇 <리들 기딩>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공지능, 응용 통계¹가 두렵지 않을 것이다. ②

¹ 세계적인 과학소설 작가 테드 창은 인공지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능과 같이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용어 대신에 응용 통계(Applied Statistics)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2023년 교육정책이슈 토론회

관리체계 일원화로 유보통합 시계 빨라진다



한 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교육정책이슈 토론회’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6월 12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시대,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주제로,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은 지난 4월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유보통합 관련 이슈별 대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관리체계 일원화 우선 추진...

유보통합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

우리나라는 만 0~5세 유아를 위한 교육·돌봄 기관이 유치원(교육부·교육청)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지자체)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런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의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로 하여,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교사·학부모·기관단체 대표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재훈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과거에는 여러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며 유보통합을 추진하지 못했다.”라며 “이번에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면서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여 유보통합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체계 일원화로 유보통합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 계획에 따라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2023~2024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2025년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한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주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좌장(영남대 교육학과 교수)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관리체계 일원화는 준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의 시간표를 달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관리체계 일원화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그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리체계 일원화 이후 재정 통합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청, 시·군·구청의 보육 예산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영유아 특성·발달 고려한 모델 개발

부모·교사 등 현장 요구에 귀 기울여야

정부는 기존 보육 예산 등의 이관 등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 등을 검토해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보통합에 따

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기관으로 재설계한다는 원칙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관리체계 일원화로 유보통합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첫 단추는 잘 끼웠다. 독일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시도교육감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은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선(先)지방 후(後)중앙으로 단계별 추진은 바람직하나, 어느 정도 시차를 두느냐가 중요하다. 이로 인한 행정적 공백이 없어야 한다.”라며 “일원화 과정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육사업이나 예산이 철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유보통합이 영유아 발달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유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보통합이 되면 영유아를 위한 교육·돌봄 서비스의 질이 정말 좋아지는지 학부모들은 궁금해한다.”라며 “조직과 재정이 먼저 이관되어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POR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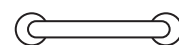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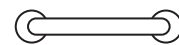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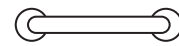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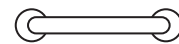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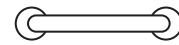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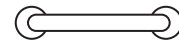
고교학점제 시너지를 가져올 학교공간 혁신

학생참여와 학생수요 중심으로 구성된 공간

교과교실제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 용어지만, 요즘에 와서는 주로 고교학점제형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통용된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나간 쌍두마차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교과교실제 공간구성 사업 학교라 할 수 있는데, 이들 학교들은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 학생 중심과 참여를 원칙으로 한 고교학점제형 공간 혁신과 문화 조성 등 황무지에서 고교학점제의 씨앗을 뿌려 왔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실행한 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북 구미의 사곡고등학교를 찾아보았다.

학교 로비에 들어서자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안내 로봇이 반겼다. 학생들이 로봇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다분히 전시용이 아니라 실용적인 로봇임을 느꼈다. 한켠에 구성된 작은 무대 위에는 업라이트 피아노가 정돈되어 있었고 이곳에서 열릴 다양한 문화행사를 상상해보았다. 깔끔한 LED전광판에는 행사가 안내되고, 학생들의 행복한 미소가 절로 떠오른다.

2, 3, 4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둘러보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학교 건물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어딜가나 학생들이 앉아서 쉬거나 자습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종류별로 마련되어 있고, 복도마다 있는 책장에는 학생들이 입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책들이 준비하게 비치되어 있었



다. 통일감 있는 자습공간이 조금 지루해 질때면 어김없이 색다른 구성의 자습공간이 나타난다. 창밖을 보며 스텐딩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나 계단식으로 된 넓은 공간에서는 수업을 위해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보았다. 테라스에 벤치형 자습공간이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놀라웠다.

담당부장 선생님은 학생참여와 학생수요 중심의 공간구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관리하기 편한 공간, 퍼실리테이터가 추천하는 공간이 아닌 학교의 주인인 학생에게 공간을 돌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면학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다. 명칭은 그 옛날 그대로 '면학실'이었지만, 내부 공간은 요즘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학습공간인 스터디 카페를 보는 것 같았다. 공부할 맛이란 게 여기서 생길 것 같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학교공간

모든 교실에는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어 또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도 질 높은 원격수업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었고, 각 층에 있는 프린트기 및 PC, 필요에 따라 댄스실 또는 갤러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니 다시 한번 대학에 온 기분이 들었다.



이런 기분이 든다는 것은 고교학점제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여러 공간을 보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웠던 공간은 2층 교무실 옆에 있던 교사카페였다.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교사카페라고 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가구가 놓여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일 뿐인데, 이런 공간 자체가 몹시 부럽다. 교사들은 학교에 모여서 주로 학생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꾸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지 좋은 교육방법이 나오고 협업할 수 있다. 공간이 사람을 모이게 만든다는 말은 이곳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평소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생활하는 곳이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학생들도 분명 쉬과 휴식, 여가생활을 위한 학교 공간이 필요하다.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2025학년도가 되면 1~3학년이 모두 매주 2시간 이상의 공강 시간이 발생한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학교장의 재량이 크겠지만, 일단 좋은 공간이 구성된 학교는 선택지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해 본다. ⑦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여름, 썩물빛과 물비늘에 빠지다

7월 엔 학교마다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방학하면 여행이 떠오릅니다. 여행하면 산과 바다를 빼놓을 수 없지요?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산에 오르다가 힘이 들면 너럭바위에 누워가며 쉬기도 합니다. 그때 살갗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빛을 보면 기분은 배가 됩니다. 나뭇잎 사이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순우리말로 ‘썩물빛’이라고 합니다. 썩물빛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산길을 내려오다 보면 꽃구름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빛을 띤 아름다운 구름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입니다. 산은 자연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어 참 좋습니다.

저와 함께 사는 아이들은 바다를 좋아합니다. 물놀이도 좋아하지만, 큰 아이는 바다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두기 바쁩니다. “아빠, 저기 물이 만들어 낸 무늬를 뭐라고 말해?”라고 묻는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햇빛에 비쳐서 반짝이는 잔물결을 ‘물비늘’이라고 해. ‘윤슬’이라고도 하고.” 어린아이가 물비늘이 아름답다고 느끼니 아이에 대한 애정이 가슴 속에서 물결쳐 여울지는 순간입니다. 여울은 바다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서 물살이 세계 흐르는 곳을 말합니다. 사람의 감정 또한 힘차게 설레거나 움직인다는 뜻으로 ‘여울지다’라고 표현하지요.

올 방학 여울지게 할 것은 무엇일까 기대됩니다. ☺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교과서가 찾아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 AI 디지털교과서란?

AI 기반
학생
진단분석

- **학생** 최적의 학습경로와 맞춤 처방 및 지원 제공
- **학부모** 학업성취, 교과 흥미 현황 등 자녀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공
- **교사** 학급별/학생별 학업 참여도 등 학생별 지원 필요사항 제공

▶ AI 디지털교과서는 언제부터 어떤 과목이 도입되나요?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 도입

~2028년

국어, 기술·가정, 사회,
과학 과목으로 확대

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형 교육시대를 열고
학생들의 인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 에서 확인하세요!